

서울 종부세 29% 늘어… 9년 만에 1조 돌파

국세청, 전국 1.6조원 중 62% 차지
작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큰폭 증가
성동·강서에서 각각 61·42% 늘어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가 9년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보다 2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1조65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 지역 종부세수는 2008년 세 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 지역 종부세는 2016년 감소(-8.0%)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무서별로 보면 토지분 종부세 증가 등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밀집한 시내 세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세무서는 삼성세무서로 171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종부세수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남대문세무서가 두 번째로 많았고, 역삼세무서가 12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지역의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에도 일부 합산 과세가 시작되는 점도 서울 지역 종부세수를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서울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7만8249호로, 전체 38만3801호의 20.3%를 차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무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원으로 전년보다 66.0%나 증가했다. 종부세무서 역시 전년보다 83.2%나 많은 343억원을 종부세로 걷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서울 지역 평균 이상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농업직불금 1.5조 조기 지급

농식품부, 오늘부터 113만명 대상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올 여름 폭염과 태풍 재해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직불금 1조513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직불금 지급시기를 2개 월 앞당겨 농업인 113만명에게 이달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액은 1조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억원이 증가했으며 지급 대상면적은 4000㏊가 증가한 128만8000㏊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3만2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3만9000원, 밭 직불금 32만1000원, 조건불리 직불금 31만1000원이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3만2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3만9000원, 밭 직불금 32만1000원, 조건불리 직불금 31만1000원이다.

직불금은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7일부터 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이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 재해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업인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현판식 진행 모습.

/해수부

韓-印尼,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개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해양과학 협력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와 함께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니 치르본에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니 해양조정부 루사파(Laksda)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 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해양협력 사업 중 하나이자 신남방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됐다.

이어, 지난 5월 9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루흐트 인니 해양조정부장관이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이행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인니 치르본의 반동공과대학 제2캠퍼스 내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리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 등 센터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로 추진됐다.

이어, 지난 5월 9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루흐트 인니 해양조정부장관이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이행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인니 치르본의 반동공과대학 제2캠퍼스 내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리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 등 센터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주요권역은 권역마다 쇼핑(명동),

트렌드(강남), 체험(삼성역), 짊음(홍대), 패션(동대문) 등을 주제로 각각 이벤트가 진행되며, 부대행사 등을 통해 핵심 할인 품목(컬러 아이템)에 대한 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역 이벤트는 개막식 점이 같은 강남 패스티벌 행사와 연계해 추진해 행사 인지도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거리 이벤트

정책브리핑

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안전점검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노·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후에는 생산설비의 일시적인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지속된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높아 공기가 안전에 우선되지 않도록 적정공기를 준수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최신웅 기자

국토부

국공유지 민간 투자유치

정부가 남해안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서 전남 고흥 금의시비 공원, 여수 남산공원, 광양 중동해양공원, 경남 남해 다팽이 마을, 통영 달아전망대, 거제 병대도 전망대 등 11곳의 투자유치 대상 부지를 발굴했다.

투자유치 유형은 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 문화예술시설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채신화 기자 csh9101@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며 지연돼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된다. 대법원장이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헌법재판 자격과 구성의 행정과 과정’ 보고서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지명 뿐도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며 “대통령 소속정파에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은 더욱 강화되고 구성에 있어서의 다원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헌법재판관 선출에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개부(기본권·연방분쟁)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각 8명의 법관이 있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각 4인씩 선출한다. 형식적으로는 법관을 연방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의회가 주도해 선출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여서 청와대가 사법부 인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동의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

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여서 청와대가 사법부 인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동의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



해수부

바다셰프 요리대회 팀 접수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2018 바다셰프 요리대회’의 참가팀을 이달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요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요리를 발굴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일반부와 어촌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5개 팀(2인 1조)씩 총 10개 팀을 모집한다. 일반 부에는 전문 요리를 제외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어촌계 부문에는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부녀회원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